

2017년 실무종합(경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학원 (054) 823-9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해설 →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협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협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추정적 위협)이 있을 때 가능하다.
- ③ 위협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해설 → ①③④ 옳은 지문이다.
②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협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협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상위험(추정적 위협)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 ② 국회경위와 파견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경찰관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 해설** ▶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넘는 분야에 관하여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를 가진다.
- ② 국회법 제144조 제3항
-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4조 제2항)
- ④ 법원조직법 제60조

4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공무원법」 제정	㉣ 중앙경찰위원회(6인) 설치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해설 ▶ ④ 중앙경찰위원회 설치(1947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 (1969년) → 경찰법 제정(1991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5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정무직)으로 한다.
-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소방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해설** ▶ ① 경찰법 제5조 제2항 · 제3항
- ② 동법 제6조 제4항 제2호
- ③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제3호)
- ④ 동법 제6조 제1항

6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③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② 동법 제6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
 ④ 동법 제6조 제3항

7 「국가공무원법」상 직권휴직과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직권휴직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③ ㉢㉣㉥ 3 항목이 직권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8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규명령의 특징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 ②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 해설** ▶ ①④ 법규명령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②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④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설** ▶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동직제 제44조 제1항)
 ③ 동직제 제44조 제2항
 ④ 동직제 제44조 제3항

10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경찰공무원의 특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반특기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형사·수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외사 및 기술(정보통신·항공·해양)특기로 분류한다.
- ② 특기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로 거쳐서 분류한다.
- ③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전문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이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상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 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설 ▶ 2016.12.30.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답이 없다.

1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③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한 자
- ④ 사의를 표명한 자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②④ 모두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③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동규칙 제120조 제3항)

12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 해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
 ②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고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④ 동법 제11조 제2항

13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해설** ▶ ① 이 지문이 옳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동법 제9조 제3항)
 ㉢ 동법 제14조 제7항
 ㉣ 동법 제11조

14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 ② 동법 제29조 제1항
 - ③ 동법 제31조 제1항
 - ④ 동법 제32조

15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 ②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 ④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1호
- ②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5조 제5항)
 - ③ 동규칙 제115조 제3항
 - ④ 동규칙 제155조 제6항

1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5항)
- ③ 동법 제12조
- ④ 동법 제11조의2 제4항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② 동법 제10조 제1항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 ④ 동법 제19조 제2항

18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은?

- ① 제한지역
- ② 제한구역
- ③ 통제지역
- ④ 통제구역

해설

- ④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9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2항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③ 동규칙 제1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8조

20 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아실현의 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또는 공무원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② 안전 욕구는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또는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③ 존경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또는 휴양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해설** ▶ ①②④ 옳은 지문이다.
 ③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이다.

21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비업”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 혼잡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① ㉠㉡ 2 항목이 옳다.

-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 ㉡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22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 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하는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반려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해설** ①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5항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동규칙 제9조 제2항)
③ 동규칙 제7조 제4항
④ 동규칙 제8조 제1항

2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하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생지”란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 ③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 ④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 등”은 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 해설** ①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는 발견지이다.(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8호)
③ 동법 제2조 제2호

- ④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24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감상실업’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해설 → ②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모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2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는 감청이 아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② 동법 제2조 제11호
③ 동법 제8조 제3항
④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해설**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②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
④ 업무방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조 제3호)

27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②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 해설** ▶ ①②③ 모두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2항 제4호)
④ ‘죄가 안됨’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69조 제2항 제3호)

28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연정화법 -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다.

- ② 선수승화법 - 특정 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 ③ 세력분산법 -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 ④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약화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해설 ▶ ③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경쟁행위법이라고 한다.

29 집회 및 시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질서유지선으로 사람의 대열, 버스 등 차량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도경계석·차선 등 지상물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자진해산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해설 ▶ ①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③ '질서유지선'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때,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인도경계석·차선 등 지상물도 질서유지선이 될 수 있다.
- ④ 대법원 2000.11.24. 2000도2172

30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④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해설** ▶ ① 청원경찰법 제4조 제3항
 ② 동법 제8조 제1항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3조

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고속도로에서의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② ㉡㉢㉥ 3개는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처벌특례 항목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2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②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 ③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
- ④ 「형법」상 시설제공이적죄

해설 ▶ ①②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③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2호 참고)

33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②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결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사상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되지 않는다.
- ④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해설 ▶ ① 신호위반이라는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② 대법원 2011. 7.28. 2009도8222
 ③ 대법원 2004. 8.30. 2004도3600
 ④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 제2호

34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④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설 ▶ ① 보안업무규정 제34조
 ② 동규정 제33조 제2항

- ③ 동규정 제33조 제3항
- ④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4호)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숫자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의 기재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시간 전부터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① ㉠ 720 ㉡ 36 ㉢ 24 ㉣ 12 ㉤ 24
- ② ㉠ 720 ㉡ 48 ㉢ 24 ㉣ 12 ㉤ 24
- ③ ㉠ 720 ㉡ 36 ㉢ 12 ㉣ 24 ㉤ 12
- ④ ㉠ 720 ㉡ 48 ㉢ 12 ㉣ 24 ㉤ 12

해설 → ② 이 지문이 옳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7조 제1항

36 「국가보안법」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
- ②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등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법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 해설** ▶ ① 대법원 1995. 7.28. 95도1121
 ② 국가보안법 제10조
 ③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6조 제1호)
 ④ 대법원 1995. 9.26. 95도1624

37 「출입국관리법」상 여권과 사증(Vis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8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여권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②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98조 제1호)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④ 동법 제27조 제2항

38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상륙 허가기간 중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단, 기간연장은 없음)

- ①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다만,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④ 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려고 할 때(다만,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 ①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 제1항)
 ② 3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2 제1항)
 ③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④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39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③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다.
 ④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해설** ▶ ①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 제3호)
 ② 동규칙 제2조 제8호
 ③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동규칙 제76조)
 ④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동규칙 제16조)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15조 제2항 -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 7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인 경우
3.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비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① ㉠㉡㉢

② ㉠㉡㉣

③ ㉠㉢㉣

④ ㉠㉢㉤

해설 ▶ ① ㉠㉡㉢ 3 항목이 옳지 않다.

㉠ 청구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